

겨레얼살리기와 3.1운동 미래 100년

-2019 겨레얼 백일장, 토론회 자료-

<목 차>

제1부 겨레얼 살리기

21세기와 겨레얼의 사명

제2부 3·1운동과 미래 100년

삼일운동 미래 100년과 조화 상생

3·1운동인가, 3·1혁명인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종교의 역할과 과제(요약)

3·1운동의 정신과 미래 100년의 준비

3·1운동 미래 100년을 위한 시민운동의 과제 (요약)

제1부 겨레얼 살리기

21세기와 겨레얼의 사명

성균관대 교수 최 문형

1 겨레얼 살리기 운동의 점화

2002년에 새롭게 닥쳐온 민족의 위기에 직면하여 거국적인 ‘겨레얼 살리기’ 운동을 점화한 것은 다음 해인 2003년입니다. 우리의 바람과 관계없이 주변국들 때문에 언제 또 다른 전쟁을 겪게 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으로부터 이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불가피한 전쟁이 또 다시 시작된다 해도, 그래서 우리가 동강난 시체의 물골로 굴러다닌다 해도, 이전에 그랬듯이 우리는 살아야 하고 또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는 전쟁과 사회 혼란이 닥쳐와 호흡이 끊어지고 맥박이 뛰지 않게 된다 하여도, 정신이 살고 혼이 살고 열이 살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운동은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똑바로 보고 정신을 차려 민족의 위기를 헤쳐 나가자는 마음으로 일어난 범국민 운동입니다. 이는 반만년 역사 동안 우리 민족 앞에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곳곳이 이겨낸 것처럼, 우리 안팎에 놓인 위기를 다시 한 번 극복하여 자랑스러운 통일 조국을 만들어 내자는 운동입니다. 즉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바로 우리 한사람 한 사람이 나서서 위대한 조국 만들기에 앞장서자는 운동입니다. 이제는 겨레얼의 정기를 다시 꽃피워 세계화시대에 어울리는 열매를 맺자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2003년 4월부터 ‘겨레얼 살리기 국민운동’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의 근본 취지는 밖으로는 민족적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혼미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우리의 주체성과 생존권을 지키자는 것이고, 안으로는 남의 것에 정신이 팔려 혼을 잃고 살아가는 가치관의 혼돈에서 벗어나 겨레얼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도덕성을 회복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과 세계평화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이미 1960년대 이후로 근대화와 산업화에 박차를 가해 세계를 놀라게 한 경제발전을 이루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강대국의 힘겨루기 때문에 핏줄끼리 총부리를 겨누었던 6·25전쟁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처받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새마을 운동’의 기치 하에 우뚝 일어나 세계가 감탄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이 발전의 추동력은 조상 대대로 물려온 가난을 벗어 버리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며 이를 악물었던 대각성 운동으로서, 이 같은 ‘새마을운동’의 정신은 농촌과 도시 할 것 없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한 이 운동은, 일본이 우리에게 심어 놓은 부정적 인식과 패배 의식을 한 번에 씻어 버리고, 우리 민족도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면 자랑스러운 조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의 못자리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 각지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미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이 모델을 도입하여 경제발전을 이루어 냈고, 지금도 경제성장에 안달이 난 중국 정부가 농어촌 근대화의 상징인 새마을 운동 농촌을 근대화하기 위해 이 운동을 배워 가고 있습니다.

이 ‘새마을 운동’이 정부 주도의 경제운동이었다면 ‘겨레얼 살리기 운동’은 민간주도의 정신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한반도의 남쪽을 대상으로 한 운동이었다면, ‘겨레얼 살리기 운동’은 한반도를 뛰어넘어 8천만 국내외 한민족을 하나로 묶는 민족공동체 운동입니다. 이 운동 안에서 우리는 남녀, 빈부, 지역, 여야, 보혁, 좌우의 모든 신분과 이념을 뛰어 넘어 모든 힘을 총집결하고, 그 힘을 조직적으로 길러 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100여 년 동안 이루지 못한 통일된 자주 독립국가를 이 땅에 건설하여 누구나 평안하고 누구나 행복한 세상을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언제 통일을 이루게 될지 그것이 또한 어떤 방식의 통일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1945년의 해방이나 1953년의 휴전협정과 같은 성격을 띠다면 그 통일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일본이 미국, 영국을 상대로 일으킨 ‘태평양 전쟁’은 미국이 핵폭탄을 사용함으로써 일본에게 점점 불리하게 진행되어, 결국 일본은 1945년 8월 15일에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하

게 되고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해방은 한민족의 오랜 독립운동과 항일투쟁에 힘입은 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일본이 패전함에 따라 여러 연합국이 국제적인 공약을 이행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연합국의 승리에 의지한 바가 큰 이 해방의 성격은 민족진영 내부에 분열을 불러오게 되어, 국내 독립 운동가들이 친미파와 친소파로 갈리게 되고 결국 분단으로 이어지는 불완전한 해방으로 그치게 된 것입니다.

1927년에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제휴하여 민족주의를 표방한 항일독립단체 신간회(新幹會)가 발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간회는 발족한 지 4년 만에 일제의 탄압과 내부의 불만으로 해산하고 맙니다. 신간회의 해산, 그리고 ‘남조선 대한국민대표 민주의원’과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좌우합작 실패는 커다란 아쉬움과 함께 한국 현대사에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나라 잃은 서러움을 달래며 치열한 독립운동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이념분쟁에 휩싸여 민족이 분열되고 만 비극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민족이 하나된 마음으로 자주적인 통일을 성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4대 강국의 사이에서 항상 어려운 판단과 선택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지혜롭게 이 힘의 역학관계에 대처해 간다면 역사의 신은 우리의 손을 들어 올려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감정에 치우쳐 현명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겉모습만의 통일은 오히려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을 예고할 것입니다. 이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꾸려 변영의 한민족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때입니다.

이 ‘겨레얼 살리기 운동’은 모든 한국인이 바른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를 순회하면서 수 차례 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중국 연변 하얼빈, 일본 오사카, 우즈베키스탄, 독일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파리, 카자흐스탄 등에서 순회 강연회를 개최하여, 해외에 흩어져 사는 한민족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도 담당해 왔습니다.

특히 2006년에는 금강산에서 남과 북이 공동으로 행사를 열었으며, 2011년부터는 해외에 흩어져 사는 동포들의 자녀를 초청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고등학생 백일장 대회와 토론대회, 대학생 토론대회를 열어 자라는 꿈나무들에게 겨레얼의 정수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부 설립을 시작으로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룩셈부르크 등 유럽 지역에 12개 지부, 중국, 연변, 일본, 카자흐스탄 등 아시아에 각각의 지부를 두어, 순회강연회, 자녀초청연수, 백일장대회, 마라톤대회, 청소년 축제, 백두산 탐방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겨레얼 살리기 범국민 운동’을 집집마다 학교마다 직장마다 펼쳐 한민족의 마음마다에 겨레얼이 꽃피면, 다가오는 태평양 시대에 평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우리 민족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9세기부터 이제까지의 역사가 서양문명이 동양으로 밀려들어오면서 미움과 갈등을 초래한 시대였다면, 앞으로의 역사는 동양의 빛이 서양을 비추어 화해와 사랑을 주는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분열에서 사랑으로

서구의 이성과 지성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이끌었고, 문명의 도움으로 인류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술과 자본의 이로움에 폭 빠진 사람들은 모든 것을 돈으로 계량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인생의 의미까지도 물질로 환산하는 어리석은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술도 과학도 문명도 돈도 그것을 소유하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야 마땅한데, 오히려 사람이 거꾸로 물질에 끌려 다니는 잘못된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으로 환산하여 가치가 없으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인격과 존엄성도 보장받지 못하고, 물질을 빼앗기 위해서는 남의 목숨을 짓밟는 일도 서슴지 않는 무섭고 무자비한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풍조가 만연하다 보니, 급기야는 자신이 물질적으로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 버리는 일까지 일어나는 한심한 현실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물론 서구의 지성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고귀함에 관하여 역설해 왔습니다. 또한 자유, 평등, 박애라는 민주주의 이념을 지켜 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민주주의 정치나 자본주의 경제나 모두 인류의 행복과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서구 문명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동양의 지혜에 눈을 돌리고 있을까요? 지구촌 시대에 맞닥뜨린 수많은 문제 상황들이 서구 지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문명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고 질책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서구 문명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성이고 분별력입니다. 인간과 자연을 모두 아울러서 똑 부러지게 구분하지 않는 동양과는 달리, 서양에서는 인간의 분별력으로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분석합니다. 동양에서는 자연과 신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자연의 법칙 속에 신성(神性)이 존재하고 깃들여 있다고 생각했는데, 서양에서는 자연으로부터 일찌감치 신을 분리해 냈습니다. 그리고 신들의 세계에도 복잡한 위계질서가 있고 나아가 이 질서를 초월해 버린 유일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동양에서는 신과 자연을 분리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인간 또한 자연 속에 묻혀서 지내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복은 가장 ‘자연스럽게’ 자연을 닮아서 사는 것입니다. 자연의 변치 않는 법칙과 질서는 그대로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 떼땃한 양심이 되고 인간성 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의 신은 따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계시는 님’입니다.

서양에서는 인간과 자연과 신과 다른 존재들을 일일이 나누어 생각하다 보니, 그 때문에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소외되고, 인간으로부터 인간이 소외되고, 인간으로부터 자연이 소외되고, 신으로부터 인간이 소외되고, 인간으로부터 신이 소외되는 등 여러 가지 종류의 분열과 불화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서구 문명의 이로움이 이 분리사고로부터 나온 것은 사실이고 우리가 그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는 것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분리와 분열로부터 생겨난 미움과 다툼과 질병과 전쟁과 재앙이라는 부작용과 부산물을, 필요악이라고 수긍하고 넘어갈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부터 인간이 소외되는 현상은 미움과 다툼을 가져왔고, 인간으로부터 자연이 소외되는 현상은 에이즈와 같은 질병과 지구환경의 무차별적 파괴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작용을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서구는 내부로부터 자성과 질책을 쏟아냈고, 그 해결방안을 동양의 세계관으로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분리해 내지 않은 동양의 가치관, 그래서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소외되거나 인간으로부터 인간이 소외되는 일이 없는 이 ‘혼돈’의 세상을 독일의 철학자 헤겔(G.W.F. Hegel)은 낙후되고 발달하지 못한 정신이라고 평가 절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세계관과 가치관이 21세기 문명의 위기에 맞닥뜨려 아무 대책 없이 떨고 있는 인류 앞에 빛을 던져 주게 된 것입니다. 신과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보는 이 세계관은 한국인들의 마음속에서 고대의 풍성한 제천의식으로 되살아나고, 어느 한 종파에 치우치지 않는 원효대사의 화쟁(和諍) 사상, 한국적 불교의 진리로 그려지고,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추구한 율곡선생의 이기묘합(理氣妙合)과 같은 한국적 유학사상으로 되새김되었으며, 구한말 각종 민족종교와 주체적인 민족정신으로 빛을 뽐냈던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는 전 세계인을 열광시킨 매혹적인 한류로 부활하여 겨레얼의 자긍심을 뽐내고 있습니다. 신과 인간의 조화 속에서 신명이 나고 이상과 현실의 세계가 하나가 되는, ‘생명의 흐름’을 충만히 지닌 한국문화의 멋진 전일성이 세계인의 마음을 흠치고 있습니다. 태곳적 풍요와 평화의 신들림은 단군의 홍익인간의 세계로부터 흘러나와 하늘과 산과 땅을 하나로 이룬 너른 무대에서 현묘한 풍류의 도로 이어지고, 이것이 결국에는 개방과 포용과 창조의 정수인 한류문화로 꽃피운 것입니다. 인종이나 민족이나 국적이나 종교나 이념이나 사상을 넘어서, 그저 따뜻한 사람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이 모인 한류! 한국 젊은이들의 노래와 춤이 세계인들의 심금을 온통 흔들고 “코리아! 코리아!”를 연달아 외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그 바탕에는 다름 아닌 생명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겨레얼의 힘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3. 21세기와 동방의 빛

일찍이 공자孔子는 정치에 관한 제자의 질문에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해 주고, 국방을 튼튼히 해 주고, 백성들이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중요한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묻자 ‘마음속의 믿음’을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이 말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 간의 바른 마음에 근거한 믿음 이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경제적 풍요와 안전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역사는 복지과 안보 면에서는 불안정한 시기를 수도 없이 거쳤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켜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민족의 마음 밭에 뿌리내린 ‘믿음’ 덕분이 아니었나 합니다.

이 믿음은 하느님이 선택한 족속인 천손이라는 믿음, 고난을 이겨 내면 홍익인간의 밝은

세상을 열 수 있으리라는 믿음, 조상들의 열과 꿈이 늘 우리를 지킨다는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은 바로 우리의 민족혼이고 겨레열이고 정신의 정수(精髓)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제정신을 차려서 이 열을 붙잡고 우리 앞에 놓인 험난한 산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이 저력이 지닌 은근과 끈기는 우리의 나라꽃 무궁화의 속성과도 같습니다. 무궁화는 한 철에만 화려하게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지기를 반복하며 끈질긴 생명력을 과시합니다. 일제가 우리 국토를 강점했던 당시 그들은 우리 겨레의 꽃 무궁화를 우리 산천에서 멸종시키려고 갖은 짓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무궁화 뿌리의 질긴 생명력은 우리 겨레의 열을 상징하듯 결코 꺾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올해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3·1운동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려는 독립의 정신, 백성[民]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민주주의 정신, 계층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뜻을 하나로 모은 통합의 정신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 고귀한 정신은 아직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식민지 시대의 후유증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고 70년 넘게 분단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빛의 속도보다 빨라지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그보다 빠른 속도로 소외되고 멀들어 갑니다. 특히 기술발전을 주도해 온 서구사회에서는 자신들의 정신적 공허를 동양의 지혜에서 채우고자 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서양세력이 동양으로 밀려왔지만, 정신적으로는 거꾸로 동양의 빛이 서양을 비춰 주는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겨레열의 상생과 융화, 평화정신은 인류의 미래에 공헌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특히 요즈음 우리 사회에는 급속한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의 후유증으로 사람보다 돈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천민자본주의가 만연하게 되어, 어느 정도 먹고 살게는 되었지만 물질에 눈이 어두워 양심을 잃어버리고, 예로부터 내려온 우리의 겨레열마저도 간 곳 없이 사라져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열과 정신을 찾지 못한다면, 남북이 정치경제적인 통일을 달성한다 해도 그것은 껍데기의 통일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열과 정신을 찾아내어 살리고 지켜야 합니다.

물질에서 비롯된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관으로부터 마음에서 오는 행복을 찾는 가치관으로 바꾸는 발상의 대전환은 지금 인류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염원은 이미 우리 한민족이 마음속에 오천년간 소중히 간직해 온 작은 불꽃이기도 합니다. 평화와 겸손과 떳떳한 기상을 지켜 온 민족의 꿈이, 긴 고난의 여정을 거쳐 여기까지 온 지금, 이제는 이 불꽃을 태워 올릴 때가 되었습니다.

『맹자(孟子)』에 보면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어떤 사람에게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히고 그의 몸을 힘들게 하고 그를 가난하게 만들며 그가 하려는 일을 방해하는데, 이는 그로 하여금 분발하게 하고 인내심을 키워서 그의 약점을 강하게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역사적 사명과 상통하는 구절이

라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전 인류적 위기를 극복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반만년 동안 하느님이 내린 갖가지 시련을 겪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임무는 그 시련으로부터 얻어 낸 은근과 끈기, 사랑과 상생의 평화정신으로 전쟁과 불화로 얼룩져 분열된 지구촌을 하나로 엮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간의 설움과 시련을 밑거름 삼아 성숙해진 우리의 겨레얼은, 국제사회에서 소외되어 온 제3세계까지 끌어안고, 인류의 영원한 목적지이자 고귀한 가치인 '홍익인간'의 꿈을 실현해 내는 사명을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방의 빛이 서방으로 뻗어가게 될 시대적 전환점에 서 있는 인류에 던지는 한민족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먼저 북녘의 우리 동족에게 전해야겠고, 나아가 우리를 둘러싼 4대 강국과 전 세계에 퍼뜨려야 합니다. 이것이 겨레얼 살리기 운동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홍익인간' 이념과 가치를 숭상하는 정신은 겨레얼의 뿌리가 되어, 은근과 끈기라는 줄기를 타고 나와 인류사에 빛날 새로운 문화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이 꽃은 남북 간의 균형 잡힌 경제발전이라는 형태로, 그리고 참여민주주의를 통한 국민 대화합이라는 형태로 피어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겨레얼은 우리 조국의 평화통일을 통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인류 공영의 실현이라는 열매를 맺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겨레얼 살리기 운동'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통일을 이룩하는 그 날까지, 그리고 우리의 통일이 인류평화를 가져 올 그 날까지, 8천만 한민족이 이념과 체제의 대립을 뛰어넘어 손잡고 나아가며 함께해야 할 민족의 마지막 정신혁명이며, 민족을 다시 살려 내는 정신운동인 것입니다.

제2부 3·1운동 미래 100년

3·1운동 “나부터”

“기미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만세.”

금년 우리는 3·1운동 100년을 기념한다. 각양 시민단체, 종교사회 그리고 정부와 민간기구가 이 날을 전후하여 다양하게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적어도 3월 1일 어느 시간 어느 곳에서라도 공동기념행사가 있으면 좋으련만 없다니 아쉽다. 필자는 100주년을 앞두고 제안을 한 바 있다. “3월1일 정오에 모임 장소마다, 가정 마다, 사찰이나 교당이나 교회 어디서든지 상관없이 종을 치자. 택시와 자동차는 경적을 울리자. 시내를 걷다가도 들판에서 일하다가도 만세를 부르자. 터질 듯이 불러보자. 각자의 “나”가, 또는 “우리”가 3·1함성의 주인이 되어보자. 이런 상징적인 행위도 하나 됨을 효율적으로 표출할 수 있을 것이다.”

만세의 내용은 “대한독립”이다. 언제 시작되고 언제 결실되었나. 우리의 고백이다. 1919년에 시작되었고 1945년에 성취되었다고. 8·15에 결실된 독립의 씨앗은 이미 3·1에 뿌려졌다. 이 씨앗은 3·1운동 이후로 계속되는 일제의 억압과 조선인의 좌절 속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열매로 익어온 셈이다. 3·1의 시작에서 8.15의 결실을 넘어 오늘날 까지 100년을 이어 오면서 성숙을 향하여 계속되고 있다.

3·1이 외친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대한제국이 아니었다. 왕권중심에서 민권중심으로, 신민에서 국민으로 주체와 주인이 바뀐다. 그래서 헌법전문에 명시된 대로 3·1정신을 계승한 이 나라는 “민주공화국”으로 그 정체성을 삼는다. 그래서 3·1운동은 가히 혁명적 개혁을 일으켰다고도 말한다. 바로 이 새 나라의 주인은 “대한국민”이다. 대한민국이 “독립”을 먹고 산다면 대한국민은 “자유”를 먹고 산다. 3·1에서 시작된 독립의 성숙은 자유의 성숙이다. 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들 각자의 “나”는 “자유인”이다. 민주공화국으로 자처하는 이 나라는 “자유인의 공동체”이다. 각자가 누리는 자유는 나 홀로의 이기주의적 자유가 아니다. 당신 앞에서 내가 누리고, 나 앞에서 당신이 누리는 나와 당신이 함께 누리는 “공동체적 자유”이다. 이제 “나부터” 이런 존귀한 자유의 행진을 시작하자.

3·1운동은 종교인들 중심의 민족지도자들이 이끌었다. 천도교, 불교, 기독교 세 종교가 연합하여 이끈 것이 아니다. 종교 간의 연대가 아니다. 천도교인, 불교인, 기독교인, 곧 종교인들의 연합이고 협력이었다. 이런 연대가 오늘의 다원화된 사회를 민주적으로 살아가는 훌륭한 모델이다. 종교는 다르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위해서는 같은 민족 구성원으로서 연대가 가능했다. 말하자면 “화이부동”의 본보기이다. 종교뿐만이 아니다. 이념, 사고, 지연, 학연, 성별, 세대별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자. 이 땅에서 공생하는 우리 모두의 삶의 가치를 고양키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연대하자. 그래서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자유, 정의, 평화, 인권, 복지를 아름답게 가꾸고 화음으로 승화시키는 오케스트라 사회를 만들자. “나”부터 이 장엄한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자원하자.

3·1운동은 출발부터 민족의 자유와 독립이 동북아 주변 국가들과의 “정당한” 그리고 정의로운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평화공동체”를 주창했다. 식민통치 억압에 대한 분노와 보복의 차원을 넘어 동북아 당사국들이 상부상조함으로 공동의 안보와 복리를 누림이 마땅하다는 성숙된 외침을 발했다. 너 죽고 나 죽자는 전멸의 전쟁을 막자. 너 죽고 나 살자는 편협한 가학적 국가승리주의도, 반대로 너 살고 나 죽겠다는 자학적 국가패배주의도 평화의 길이 아니다. 정답은 이것이다. <너 살고-나 살고>의 공생과 상생이 3·1이 제시한 평화공동체의 구상이었다. 우리는 자유, 평화, 정의, 인권, 생명이라는 기본 가치관을 바탕으로 남북 간에 그리고 한반도와 주변 동북아 나라들 간에 상생과 화해의 평화를 심는 운동에 나서자. 이제는 “나부터” 동북아와 세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평화 만드는 사람”이 되자.

3·1운동은 위대한 시작이었다. 그리고 한 때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위대한 과정이다. 그래서 3·1운동 100주년은 지나온 날들의 기념이면서 동시에 다가올 시대를 향한 비전을 가꾸는 과제이기도 하다.

삼일운동 미래 100년과 조화 상생

한양대 명예교수 윤 석산

1

삼일운동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는 ‘화합’과 이 화합을 통한 ‘조화와 균형의 삶’을 이루려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그 준비과정이나 전개과정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으로, 천도교와 기독교와 불교가 자신들의 교리를 뛰어넘어 함께 연합을 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세계의 어느 나라를 두고 보아도 이렇듯 같은 목적을 지니고 종교가 같은 목적을 위하여 함께 연합을 한 경우는 없었다. 종교란 자신의 교의가 가장 으뜸 되는 절대적 진리라는 믿음 속에서, 그 존립의 의의를 지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모습이 원천적으로 그 내면에 배태되어 있다. 그러므로 종교와 종교 간은 화합이나 연합보다는 서로 간에 배격함이 그 모습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점으로 보아, 삼일독립운동을 위하여 삼 개 종단이 서로 같이 힘을 모았고, 그러므로 함께 일으켰다는 사실은, 당시 우리 민족이 종파를 뛰어넘어, 민족의 독립을 얼마나 희구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일은 그 어디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인류 역사상 초유의 일이 아닐 수 없다.

2

우리 민족은 본래부터 화합과 조화의 삶을 지향한 사람들이다. 특히 종교에 있어서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종단과 종파는 2008년도 조사에 의하면, 54개 종교와 511 종파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다종교의 모습이 오늘 우리 사회 모습이다.

우리나라의 다종교적인 모습은 먼 옛날부터 이어져 왔다. 일컫는바 고조선 때부터 삼국 초기까지는 고신교(古神敎)인 무(巫)가 신봉이 되었고, 이 기반 위에 유(儒) 불(佛) 도(道)가 들어와 일정한 정착과정을 거친 후, 우리 사회에 두루 신앙이 되었다. 이후 밖으로부터 들어온 이들 종교들은 우리 사회에서 정치, 문화, 사회, 예술, 등등 다양한 분야 형성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신라는 불교를 가장 늦게 받아들였지만, 불교와의 융합을 통해 불교예술을 크게 꽃 피웠는가 하면, 유교를 받아들인 고려에서는 과거제도 등을 일으켰고, 조선에 들어서서는 중요한 정치이념으로 자리 잡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도교는 민간신앙으로 신봉되며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삶의 신념으로 자리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서 일정한 정착과정을 겪으며 이들 외래종교들은 우리의 토착문화나 제도, 사회와 화합하며 각 분야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또한 조선조 중기 이후 서학인 천주교가 들어왔고, 또 이후에 개신교가 들어와 정착하였다. 조선조 후기에 이르러 동학이 일어났고, 이를 이어 다양한 신종교가 생겨나 자리를 잡았다. 이와 같은 다종교적인 모습이 우리 민족의 근저에는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종교는 서로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서로 우리 사회 속에서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면이 곧 우리 민족의 깊은 근저에는 ‘조화와 화합’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이 자리하고 있다는 증

거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잘 나타난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심청전』이라는 고전소설에서이다. 소설 『심청전』의 내용은 잘 아는 바이지만, 이를 다시 보면 다음과 같다.

심봉사가 눈이 보이지를 않아 귀가에 그만 다리에서 발을 헛짚어 떨어져 개천에 빠진다. 이 심봉사를 구해준 어느 스님이 공양미 삼백 석을 절에 시주하고 빌면 눈을 뜰 수 있다고 이야기해준다. 불교에는 천수관음보살(千手觀音菩薩)이 계시어,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을 지니고 있으며, 앞을 못 보는 가여운 중생에게 광명을 준다고 이야기한다. 즉 이렇듯 소설은 불교적 구원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가난한 집안이기 때문에 공양미를 구할 수 없어, 이를 구하기 위하여 심청이는 마침 젊은 처녀를 구한다는 남경장사들에게 팔려가 인당수에 제물이 되어 빠진다. 젊은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은 고대신앙의 하나인 인신공희(人身供犧)의 한 모습이다.

그러나 바다에 빠진 심청이는 죽지 않고 용궁(龍宮)으로 간다. 용궁은 도교적 우주관에 의한 바다 밑에 자리하고 있다는, 인간계와 같은 삶의 체계를 지니고 있는 한 공간이다.

용궁에서 용왕의 도움으로 심청이는 연꽃을 타고 다시 바다 위로 떠오른다. 심청이가 타고 바다 위로 떠오른 연꽃은 부처님이 앉아계시는 연화대이다.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죽음도 불사한 심청이의 효(孝)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부처님의 자비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듯 연꽃에 실려 바다 위로 떠오른 것이다. 즉 지극히 불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대목이다.

바다 위로 떠오른 심청이는 마침 그곳을 지나던 뱃사공들에게 구원을 받고, 이내 황제에게 바쳐져 황후가 된다. 가난한 심봉사의 딸로 태어나 살다가, 죽음의 경지를 겪고 난 이후 황후로 다시 살아간다는 이야기의 구조는 우리의 건국신화에 많이 등장하는 이중탄생(二重誕生)의 신화적 의미를 지닌다. 건국신화의 이중탄생은 첫 번째 태어났다가, 다시 태어날 때에는 질적(質的) 변화를 한다. 가난한 심청이가 바다에 빠졌다가 구원을 받게 되자, 세상의 가장 고귀한 황후(皇后)가 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이 이중탄생의 구조와 같은 것이다.

황후가 된 심청이가 황제에게 부탁하여 봉사들을 위한 잔치를 열어 아버지인 심봉사를 만난다. 황제가 어려운 삶을 사는 봉사들을 위해 잔치를 연다는 것은恤民(恤民)정책의 하나이며, 나아가 유교적 효(孝)의 강조이다.

이 잔치 자리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심청이를 만난 심봉사가 너무 기뻐서 그만 눈을 번쩍 뜬다. 심봉사인 심학규가 눈을 뜨는 그 순간 전국의 봉사들이 모두 눈을 번쩍 뜨며 소설은 그 종말에 이른다. 이러한 소설적 장치는 곧 유교적 효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면, 이 힘이 지닌 사회적 파장이 얼마나 큰가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심청전』이라는 소설은 이야기를 보다 극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불교’, ‘민간신앙’, ‘고대신화의 세계’, ‘도교’, 그리고 ‘유교’ 등의 다양한 종교의 이념과 세계관, 우주관 등이 소설적 장치로 동원이 되었다. 이러한 다종교적인 내용을 지닌 『심청전』이라는 소설이 유교가 지배이념이었던 조선조 시대에 베스트셀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담긴 다종교적인 모습에 그 누구도 거부감을 갖지 않고 심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한 증거이다. 그 만큼이나 우리의 선조들은 어느 시대에도 다종교적 가치를 받아들였고, 또 아무런 갈등도 없이 화합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던 분들이다.

이와 같은 우리의 근거에 맥맥이 흐르는 정신이 바로 삼일운동을 천도교, 기독교, 불교가 연합하여 일으킬 수 있는 그 근본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삼일운동을 기획했고, 또 조직했던 천도교는 1860년에 수운대신사의 결정적인 종교체험과 함께 창명된 종교이지만, 오랜 우리의 사유와 문화적인 전통 위에서 피어난 종교이다.

천도교의 정신은 어느 의미에서 단군 이래로 이어온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홍익인간(弘益人間)’ 정신의 발로이기도 하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롭게 한다.’는 의미의 ‘홍익인간’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이롭게 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세계의 모든 인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조화로운 삶을 이루어야 하며, 이 조화로운 삶 속에서 서로 공존하고 또 상생해야 함은 당연하다. 이와 같은 조화와 공존, 상생의 발로인 홍익인간의 정신이 오랜 동안 우리의 민족 성정에 맥맥히 이어져 내려왔고, 이러한 우리 고유의 정신에 그 바탕을 두고 19 세기 중엽 창도된 가르침이 바로 ‘동학 천도교’이다.

동학을 창명한 수운대신사가 조선조 조정에 체포가 되어 대구감영에서 취조를 받을 때, ‘동학’이라는 이름에 관하여 ‘동학은 그 이름을 동국(東國)의 의(義), 곧 우리나라에서 취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做出 爲天主願我情永世不忘萬事宜 名之曰 東學 取東國之義 而洋學陰也 東學陽也 欲以陽制陰 常誦讀矣’ 『日省錄』, 高宗元年 二月 二十九日 庚子)

또한 수운대신사는 『동경대전』에서 “내가 동(東)에서 태어났고 동(東)에서 도(道)를 받았으니, 비록 도(道)는 천도(天道)이나 학(學)은 동학(東學)이다. (‘吾亦生於東受於東 道雖天道 學則東學’ 『東經大全』, 「論學文」)” 라고 설파하였다. 즉 서학에서 말하는 천도나 자신의 천도나 결국 모두 우주를 아우르는 도(道)로서 같은 도라는 것이다. 다만 그 천도를 궁구하는 학리적 방법인 ‘학(學)’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수운대신사의 지론이다. (‘運則一 道則同 理則非’, 『東經大全』, 「論學文」)

이에 이어서 수운대신사는 공자의 가르침이 비록 온 중국과 동북아 일대에 퍼져 있어도, 그 가르침을 공자가 태어났고 또 도를 처음 편 노(魯)나라와 공자의 도를 이어 유학을 중흥시킨 맹자의 고향인 추(鄒)라는 땅의 이름인 ‘추로지풍(鄒魯之風)’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들어, 자신이 이곳 동쪽인 우리나라에서 도를 받고 또 이곳에서 태어났으니, 서학이 아니라, ‘동학’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孔子 生於魯風於鄒 鄒魯之風 傳遺於斯世 吾道 受於斯布於斯 豈可謂以西名之者乎’ 『東經大全』, 「論學文」)

즉 수운대신사가 천명하는 ‘동학’이라는 이름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단순히 서학에 대응하는 뜻에서의 동학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자신이 태어났고 또 도를 받은, 바로 이곳 동방인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유와 방법에 근거한 ‘학(學)’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당시 동양에서는 ‘religion’에 해당되는 단어인 ‘종교’라는 개념의 어휘는 없었다. 다만 이에 해당되는 ‘교(敎), 학(學), 도(道)’등의 어휘가 쓰였을 뿐이다. 따라서 수운대신사는 ‘도(道)’와 ‘학(學)’을 분별하여 ‘자신이 행하는 도(道)는 이 우주를 아우르는 천도(天道)이지만, 이 천도를 궁구하고 또 이 천도에 이르는 학리적(學理的) 방법인 학(學)은 서학과는 다른 방법인 동학이다.’ 라고 말한 것이다. 즉 서양적인 방법인 서학이 아닌 동방, 곧 우리의 학리적 사유와 방법에 뿌리를 둔 방법인 동학에 의하여 천도를 밝히고 궁구하겠다는 의미가 이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즉 ‘동학’은 서학에 대칭되며 명명된 명칭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학문적 전통에 근거한 학(學)인 동국지학(東國之學), 동방지학(東方之學)의 준말임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이에는 우리의 시원을 이루는 단군의 가르침임 ‘홍익인간의 정신’이나, 이를 이은 풍류도(風流道) 등과 그 맥을 맞대고 있는 것으로, 오랜 우리의 정신이며 가르침이 19세기 수운대신사에 의하여 다시 부활한 것이라고 하겠다.(김정설,『풍류정신』, 정음사, 1986. 86-8쪽)

이러한 우리의 오랜 정신이 삼일운동을 기획하고 조직을 할 때에 다만 자신의 종교 우선주의에 머물지 않고 천도교와 기독교, 그리고 불교 등이 서로 연합을 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모습은 다름 아닌 우리 본래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많은 사회적인 갈등을 안고, 이 갈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종교의 본연은 어느 의미에서 양보와 서로에 대한 배려에 있다고 하겠다. 자기 교리 우선에서 벗어나, 이웃종교를 배려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종교의 가치가 살아난다고 하겠다. 나아가 자기희생 없는 종교는 더 이상 종교로서 설 의미나 가치가 없다. 다름을 인정할 때 진정한 독립자로서 설 수가 있다. 그러므로 진정 내가 독립자로서 설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면에서 볼 때에 양보와 배려, 상생을 통한 조화와 균형의 삶을 이룩하고자 했음이 삼일운동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다. 그러나 오늘 삼일운동 100주년을 맞아 종교의 일각에서는 서로 자신의 종단이 가장 중추적으로 삼일운동을 주도하였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간간히 볼 수가 있다. 이러한 모습은 참으로 선열들께서 남긴 삼일운동의 진정한 정신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4

일제의 강제 합병이라는 만행에 의하여 나라는 망했어도, 그 정신은 살아 있었다. 이 살아 있는 정신의 발로가 바로 삼일운동이다. 나아가 살아 있는 그 정신이 다름 아닌 화해와 조화라는 숭고함으로 현현된 것이다.

「기미독립선언서」에는 이러한 우리의 살아 있는 정신이 담겨져 있다. 우리나라 독립의 당위성과 우리나라의 독립과 인류의 평화라는 ‘조화와 균형, 상생’의 정신이 담겨져 있다. 이 「기미독립선언서」에 담겨진 정신이 바로 삼일독립운동의 정신인 것이다.

일본으로부터 굴욕적인 침탈과 착취, 억압을 받으면서도, 독립운동의 정신으로 평화와 정의와 인도를 내세웠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은 곧 우리 민족이 평화와 정의와 인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임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우리 민족의 정신이 이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인류는 모두 평등하며 또 그 어느 누구에게도 억압을 받거나 또 지배를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류 그 자체의 존귀한 생명을 지닌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생명 존중의 정신이 이에는 담겨져 있다. 상대가 지닌 생명을 존중하고, 그러므로 서로가 조화와 상생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기미독립선언서」의 모두(冒頭)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신의 발로는 인류를 조화와 균형의 삶으로 이끄는 길이며, 또한 천도교가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정신인 모든 존재가 한울님 모셨으므로, 그 상대를 한울님과 같이 섬기며 존중하고 배려하고자 하는 사인여천(事人如天)의 사회적 실천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는 것은 다만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하는 길이며, 나아가 세계의 평화, 인류의 행복을 이루기 위한 그 단계가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독립을 하여 정당한 삶의 그 영광을 따르게 되는 것

이요, 동시에 우리를 강제로 식민화하고 있는 일본은 사악한 길에 서 벗어나 자신 본연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그 본연의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독립은 우리의 본연을 찾는 길이며 동시에 일본 본연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조화와 상생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바야흐로 무력으로 남을 지배하려는 시대는 지나갔고, 도의로서 서로 공생, 공존하는 시대인 새로운 천지가 돌아왔으니, 이와 같은 신문명에 일본 역시 동참하여 새로운 조화와 상생의 삶을 이룩하도록 간곡히 권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미독립선언서」는 침략과 침탈은 공멸의 길이요, ‘평화와 정의, 도의’에 입각하여, 공생과 상생이 진정한 삶의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이 우리 민족을 강제로 병탄하여 치욕적인 식민지로 삼고, 강압과 침탈을 하고 있지만, 이는 위력에 의해 모든 것을 장악하려고 하는 구시대적인 모습이므로 이를 빨리 청산하고 새로운 봄기운과 같이 도래하고 있는 ‘조화와 공생’의 길로 빨리 들어오기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류 번영의 길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5

「기미독립선언서」에 적시되었고 또 삼일운동으로 실천되었던 정신은 다른 아닌 ‘조화와 공존, 상생’의 정신이다. 조화와 상생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긴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이다.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궁극적으로 생명존중의 문제,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생태의 문제 등으로 이어진다.

삼일운동의 정신은 바로 오늘이라는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사람과 사람, 사람과 만유의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화와 갈등, 이를 통한 파괴와 죽음이라는 문제를 정면에서 제기하므로, 오늘의 인류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신이 되고 있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조화와 상생’은 단군 이래로 이어져 내려온 우리 민족의 오랜 정신이다.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19세기 중엽 일어난 동학 천도교의 정신이기도 하다. 이러한 천도교의 정신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수운대신사의 가르침과 같이 ‘나’ 중심의 각자위심(各自爲心)에서 벗어나 ‘우리’로서 삶을 바라보고 또 실천해야 하는 동귀일체(同歸一體)의 삶이라고 하겠다.

오늘 삼일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기미독립선언서」에 담겨져 있고, 또 삼일운동을 통해 실천적으로 행해졌던 ‘조화와 상생’이라는 오랜 우리 민족의 정신을 되살려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 100년을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3·1운동인가, 3·1혁명인가

전 한성대 총장 윤 경로

1. 3·1운동은 민(民)이 주도한 ‘혁명’이다.

3·1운동 10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날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 역사적인 날을 앞두고 3·1운동을 ‘3·1혁명’으로 ‘정명(正名)’하자는 논의가 있다. 여기에 현직 총리와 여권 대표 또한 ‘3·1혁명’ 운운했다는 뉴스가 돌면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라 회자되고 있다. 이를 주창한 한 사람으로서 다소 부담을 느낀다.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지칭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그동안 ‘3·1운동’이라는 역사용어에 매우 익숙하다. 그런데 최근 일부학계를 중심으로 3·1운동을 ‘3·1혁명’으로 지칭하자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본 발제자는 ‘3·1혁명’으로 개칭하자는 주장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동안 3·1운동이라는 지칭에 별반 논의가 없었다. 그 이유는 제헌헌법에서 현행 헌법까지 수차례 걸친 개정이 있었지만 헌법 전문(前文)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후략)이라는 문구는 변한 적이 없다. 그만큼 권위를 인정받은 명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3·1운동’이란 명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곧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어느 누구도 감히 왈가왈부 하지 못했는지 모른다. 이를 문제로 삼으면 마치 헌법을 부인하는 ‘불경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을 법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00년의 시간이 흐른 이즈음 그간 신성시해온 ‘3·1운동’이란 용어에 대해서도 새롭게 인식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3·1운동’이 타율적 개항이후 왜곡된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일어났던 수많은 ‘잔물결들과 같은 여러 운동들의 하나로 보는 것은 3·1운동의 역사적 무게를 생각할 때 스스로 ‘3·1운동’의 역사적 비중을 낮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일종의 역사인식의 변화라 하겠다.

필자는 오래 전부터 3·1운동은 개항이후 타율적으로 진행된 왜곡된 근대화 과정을 바로세우기 위한 여러 형태의 수많은 세류(細流)들, 곧 여러 모양의 작은 물줄기들이 모이고 쌓여 1919년 3월 전 민족과, 전 계층이 함께하여 ‘큰 강’ 곧 대하(大河)를 이룬 대사건이라 정의해왔다. 우리역사학계에서 이 사건을 한국근대사와 현대사를 구분하는 시대구분의 분기점으로 삼는 것도 이러한 ‘3·1대사건’이 지닌 남다른 역사성 때문이라 할 것이다.

익히 아는 대로 1919년 ‘3·1만세사건’의 사건당시 명칭은 ‘소요’ 혹은 ‘폭동’이었다. 마치 1894년 반제반봉건의 기치를 높이 들고 꺾기한 동학농민혁명을 과거 ‘동학난’이라 불렀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대 지배층 혹은 기득권층에서 볼 때 그것은 ‘폭동’이고 ‘난’이었다. ‘동학난’이라는 용어가 사건 당시는 물론 일제시대를 거쳐 해방 이후 1960년대까지도 ‘동학난’으로 불렸음은 당시 역사인식이 그만큼 치자(治者)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었기 때문이다. 역사적 용어로서의 ‘운동’이라는 용어가 함의하고 있는 의미는 ‘투쟁’, ‘항쟁’, ‘혁명’이라는 의미에 비해 역사성이 덜한 인상을 준다. 또한 우리는 지난 100여 년 간 거의 ‘3·1운동’으로 불려왔기에 귀에도, 입에도, 눈에도 익숙한 것에 반해 ‘3·1혁명’이라는 용어는 생경하게 들리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역사학은 해석학이다’라는 말이 있듯 지난 과거의 사실(事實, facts)은 변할 수 없지만 역사적 사실(史實, historical facts)에 대한 역사인식은 앞서 언급한 ‘동학난’이 ‘동학

농민혁명'으로 그 의미와 해석이 달라지듯 시대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3·1운동'이라 지칭해 온 것을 '3·1혁명'으로 바꿔보자는 주장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3·1운동'을 '3·1혁명'이라는 지칭해 온 선례(先例)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 즉 해외 독립운동 단체와 독립운동가 진영에서는 일찍부터 '3·1혁명'이라 지칭했었다. 1920년대 말 1930년대까지는 '3·1운동'과 '3·1혁명'이라는 명칭이 혼재되어 사용되었다.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이후 보다 본격적인 독립전쟁과 혁명적 분위기가 전개되면서 '3·1운동'에 대한 인식도 더욱 고양되어 이후로는 이를 프랑스대혁명이나 미국의 독립운동에 비해도 결코 손색이 없는 '혁명'이라는 인식이 넓게 확산되었다. 예컨대 1938년 중국 장사(長沙)에서 거행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주관한 3·1절 기념식에서 그러했고, 같은 해 4월 <조선민족전선> 창간호 기사에도 '3·1대혁명'이라고 지칭하였다.

이러한 인식변화는 1941년 임정 산하 한국광복군 기관지인 <光復광복> 1941년 2월 창간호에서도 3·1운동을 "1919년의 전민(全民) 대혁명"이라고 규정하는 등 이후 '대혁명'이라는 명칭을 자주 볼 수 있다. 1943년 6월 재 창간된 <독립신문> 창간호에서 "세계 제1차 대전 후에 한국에서는 위대한 3·1대혁명운동이 발생했다"는 요지의 창간사를 실었다. 그리고 이후 기사에서도 '3·1대혁명'이란 용어를 자주 볼 수 있다. 해방직전은 물론 194년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 서문에서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그 일부를 옮기면 아래와 같다.

(전략) "우리 국가가 강도 일본에게 폐망된 뒤에 전 민족은 오매에도 국가의 독립을 갈망하였고 무수한 선열들은 피와 눈물로써 민족자유의 회복에 노력하여 삼일대혁명에 이르러 전민족의 요구와 시대의 추향에 순응하여 정치, 경제, 문화, 기타 일체 제도에 자유, 평등 및 진보를 기본정신으로 한 새로운 대한민국과 임시정부가 건립되었고 아울러 임시헌장이 제정되었다"(후략)

이상에서 보듯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진영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3·1혁명' 혹은 '3·1대혁명'으로 부르며 '운동성' 보다는 '혁명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해방 직후에도 변함없이 사용되었다. 이승만과 김구 등의 연설에서도 '3·1혁명' 혹은 '3·1대혁명'이라는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였다. 또한 제헌헌법 제정을 위해 결성된 헌법기초위원회가 작성한 헌법초안 전문에도 "우리들 대한민국은 3·1혁명의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초안이 국회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3·1혁명'이 '3·1운동'으로 바뀌었다. '혁명'이라는 문구는 불가하다'고 주장한 한 의원(조국현)이 "일본에게 뺏겼든 그놈을 광구(廣求)하자는 운동인 만큼 '항쟁'이라 할지언정 혁명은 아니다"라고 하며 반대 발언을 하자 당시 의장으로 사회를 보던 이승만이 "내가 절대 찬성합니다"고 손을 들어주었다. 이승만 본인도 이전까지 '3·1혁명' 용어를 즐겨 썼고 초안에도 동조했던 입장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이후에도 이 문제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평소 '3·1운동론'을 지지해온 한민당 주장대로 '3·1혁명'이 '3·1운동'으로 최종 수정 통과되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우여곡절을 거쳐 '소요'에서 '운동'으로 다시 '혁명'으로 그리고 다시 '운동'으로 회귀한 것이다. 이로서 '헌법적 권위'를 갖게 된 '3·1운동'이라는 용어는 그동안 수차례 걸친 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성역화 되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 용어 채택은 매우 중요하다. 엄혹하고 치열했던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3·1운동'이 지닌 역사성

은 ‘운동’ 차원을 훨씬 넘은 ‘혁명성’이 보다 높다고 생각한다. 민족내부의 기존체제를 전복한 ‘혁명’은 아니지만 누천년 내려오던 봉건왕조의 ‘제국(帝國)’에서 백성이 주인인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대한민국(大韓民國)’을 세운 역사적 단초를 제공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3·1혁명’이라 지칭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다.

한 사례로 중국의 경우 1911년 신해년(辛亥年)에 쑨원(孫文)을 중심으로 중화민국(中華民國)이 탄생했다. 즉 여러 천 년간의 봉건왕조를 마감하고 1911년 민국(民國)을 탄생시킨 것이다. 따라서 이를 ‘신해혁명’으로 역사화했다. 다시 말해 고래로부터의 내려오던 봉건왕조와 왕권을 종식시키고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중화민국이 탄생되었기에 이를 기리어 ‘신해혁명’이라 지칭한 것이다. 이점에 주목할 때 중국의 신해혁명과 우리의 ‘3·1혁명’ 사이에 무슨 큰 차이가 있는가. 중국은 혁명이라 하는데 우리는 왜 못쓰는가. ‘3·1혁명’이라는 큰 강(大河)을 이루기까지 있었던 그 많은 잔물줄기(細流)를 지칭하는 ‘운동’으로 지칭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역사를 비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 하겠다.

2. 민족대표 33인 평민, 서민출신이다.

익히 아는 대로 민족대표 33인은 예외없이 종교인들이었다. 당대 최고의 교세를 떨치던 민족종교인 천도교계 15인, 기독교계 16인 그리고 불교계 2인으로 결성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바는 이들 민족대표 33인은 누가 시켜서 대표가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임하여 민족대표로 나선 분들이었다. 3·1거사 초기 준비단계에서는 본래 민족대표로 당대 지명도가 높고 과거 고관대작을 했던 유명인사들, 예컨대 갑신정변과 갑오개혁 등으로 명성이 높았던 개화파 인물 박영효(朴泳孝), 구한말 대신 출신인 한규설(韓圭謨), 윤웅렬(尹雄烈) 당대 최고의 개화 지식인으로 지명도가 높았던 윤치호(尹致昊), 심지어 이완용(李完用)도 거론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중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민족대표 자리를 거부하였다.

그래서 결국 종교인들이 나서게 되었다. 당시 이들은 정치, 사회적으로 지체가 높지도, 명성도 별반 없던 종교인 인사들에 불과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는 바는 이들 33인이 예외 없이 모두 평민출신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33인을 종교계 인사라는 점에만 주목해왔는데 3·1거사의 역사적 의의와 성격을, 운동을 넘어 ‘혁명’으로 역사화 한다는 점과 연관시켜 볼 때 민족대표 33인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신분이 평민, 서민출신이라는 점은 주목할 일이다. 천도교 교령 출신인 손병희를 비롯한 권동진, 오세창 등과 기독교계의 이승훈, 길선주, 양전백 등 그리고 불교계의 백용성, 한용운 등 33인은 예외없이 평민 출신들이었다. 3·1거사 후 40여 일 만에 나라의 주권과 국권이 일반 백성 곧 평민에게 있는 나라 곧 주권재민의 대한민국을 탄생할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이렇듯 민족대표 33인이 평민출신이었다는 점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3.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이밖에 1919년 4월 10일 상해 독립임시사무소에 모인 초대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 의원들이 다음날 아침까지 꼬박 하룻밤을 새워가며 국호(國號)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헌법(憲法)을 제정한 후 정부 수반을 선출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임정)를 수립하였다. 지난 해(2018) 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을 1919년 4월 11일로 정한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였다. 이 날 임정, 임시의정원에서 결정한 <임시헌장 및 임시헌법 10조개 조항>을 결정하였다. 이 중 ‘3·1혁명’

과 관련해 몇 개 조항을 들어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1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함”(3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서의 공민(公民)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고 피선거권이 있음”(5조),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公娼制)를 전폐함”, “임시정부는 국토회복 후 만 1년 내 국회를 소집함”(10조) 등 꼽을 수 있다.

첫째, 3·1혁명은 우리 역사상 최초로 ‘대한민국임시정부’라는 민주공화정을 잉태시켰다. 3·1혁명 이후 왕정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으니 이후 복辟파(復辟派)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 ‘제국帝國’에서 ‘민국民國’으로, ‘신민臣民’에서 ‘민인民人’이 나라의 주권자로 우뚝 선 혁명적 변화가 있었다.

둘째, 처음으로 여성(女性)들이 사회변혁의 전면에 나선 사실 또한 혁명적 변화였다. 나라와 민족을 구하겠다는 일념에 남녀노유가 차이가 있을 까닭이 없었겠으나, 여성들이 대거 현실참여에 나섰다라는 사실 자체가 이전 시기에 비할 때 획기적 국면전환이자 역사발전이 아닐 수 없었다.

셋째, 기생 해녀 백정 광부 등 아직 봉건사회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분적 차별을 받던 계층이 역사전환의 주체적으로 떠올랐던 점 또한 혁명적 변화라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외세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이에 맞선 주력이 민중이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천민으로 취급받던 이들이 만세시위에 적극 참여함으로 당당한 역사의 주인으로 떠올랐다.

넷째, 3·1혁명 이후 전면적인 항일무장투쟁이 전개되었다. 3·1혁명을 계기로 식민지 조선의 수다한 젊은이들이 국경을 넘어 신흥무관학교와(新興武官學校) 같은 독립군양성학교가 생겨났다. 이들은 봉오동전투(鳳梧洞戰鬪)와 청산리대첩(靑山里大捷)으로 상징되는 독립전쟁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린 전사들이 양성 독립전쟁에 나섰다.

다섯째, 좌우세력이 통합하여 민족협동전선(民族協同戰線)을 구축하였다. 초기 임정이 그러하였으며 이후 부침이 있었으나 이러한 통합 지향은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지속되었고, 해방 이후에도 좌우통합, 통일국가 수립의 여망으로 맥을 이어나갔다.

여섯째, 제국주의 지배하에 신음하던 피압박 민족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불어넣었다. 중국 신해혁명의 주역 쑨원(孫文)이 독립선언에 이은 만세시위를 ‘혁명’이라 평가하였으며, 인도의 시성(詩聖) 타고르(R. Tagore) 또한 조선을 가리켜 ‘東方의 등불’이라 칭송한 것도 이 시기였다.

요컨대 ‘3·1혁명’과 3·1정신은 민족이 당면했던 자주독립의 목표를 넘어 자유 민주 평등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몸으로 실천한 혁명적 대 사건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그 성격을 반제국주의 민족혁명인 동시에 반봉건적 민주혁명이라 규정할 수 있다 하겠다. 더욱이 3·1항쟁이 배태한 이러한 혁명성이 앞에서 보듯 대한민국임시헌장과 정강정책으로 승화되었으니 이는 선언적 차원을 넘는 혁명적 성취를 이루었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17~8년 겨울 ‘촛불’들이 외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함성은 기실 그 원천을 3·1정신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를 재확인한 큰 울림이었다 할 것이다. ‘촛불혁명’과 ‘3·1혁명’ 사이에는 100년이라는 시차가 존재하지만 이야말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Arnold J. Toynbe)가 일찍이 적시한 ‘역사의 동시성’이라할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종교의 역할과 과제(요약)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 이사장(목사) 박 종화

1. 3·1운동이 보여준 <종교인 연대>와 <자유 · 상생 · 평화의 공동체> (생략)

2. 미래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 공동체

<3·1독립운동>에서 <3·1민주공화 실천운동>으로

- 민족 독립을 목표로 외치고 선포한 <3·1독립선언>에 대한 우리의 평가와 함께 다가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목표로 하는 <3·1평화통일선언>은, 어떠한 원칙과 방식으로 창조적 계승을 하느냐의 과제가 우리 모든 민족 구성원에게 있고, 특히 종교사회 곧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의 어깨에 드리워져 있다. 여기서 먼저 <평화통일을 위한 연대 3·1절 100주년 선언문>이 선포한 내용을 시작하는 담론으로 삼고 싶다.

“1919년 3월1일 민족대표 33인에 의해서 발표된 독립선언문은 자주독립의 정신, 자유 민주주의 정신, 인류공영의 평화정신, 연합과 일치의 정신 위에 나아갈 꿈과 비전을 제시한 혁명적 선언문이었다. 3·1절을 기점으로 대한제국은 대한민국으로, 왕권 중심의 세상은 민권 중심의 세상으로, 신민은 국민으로, 왕의 토지는 국민의 토지로 전환되었고, 우리나라는 비로소 민주공화국으로 출발하는 단초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으로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전문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제 우리는 3·1운동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발전 시켜야 한다. 우리는 일제하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던 것을 참회한다. 1945년 8월15일 일본제국주의의 패망이 민족해방의 역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민족 분단의 역사로 방치 했다. 일제하의 적폐를 교회와 국가의 차원에서 청산하도록 제대로 도전하지 못했다. 분단을 해소하여 통일 국가를 이루지 못한 채 긴장과 갈등과 대립을 일정 부분 조장했다. 그리고 분단 대결을 고착화시킨 독재정권에 대해서 예언자적인 정의와 평화의 목소리를 키우지 못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차별당하는 사람들의 인권과 풍성한 삶의 기회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했다. 민주적인 정당제도 하에서 당리당락을 제어하고 건강한 타협을 지향하도록 하지 못했다. 이를 진심으로 자성하고 회개한다. 우리는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서 이웃 종교들 간에 연대한 3·1혁명을 직시하면서, 우리 민족의 시대적 과제인 민주주의 정착과 평화통일을 위해서라면 지역, 학벌 등의 연고주의와 경직된 이념 또는 종교적 교리의 다툼 등을 초월하여 누구와도 협력하고 연대해야 함을 선언한다. 한국의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3·1운동이 정파와 이념을 넘어 연합했던 것처럼,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지금 여기 한반도에 세우기 위해 교파와 교단을 넘고, 종교와 신념을 넘어 누구와도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 위에서 밝힌 대로 3·1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며 발전시키는 과제가 대한민국 자체 내의 과제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3·1혁명과 8·15해방으로 쟁취한 “민주공화국”의 정체성과 내실을 정착시켜 민주 선진국으로 승화시켜가자는 것이다. 이 민주공화국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다. 이는 과거의 염원이었고 현재의 실제이고 미래의 비전이다. 동시에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따라서 주인이 사는 집이 대한민국인 만큼 집의 주인은 “대한국민”이다. 예컨대 국가안보는 강조하면서도 국민안보는 무시한 괴리를 수없이 경험하며 살아왔다. 그래서 국민이 “을”이고 민국이 “갑”으로 둔갑하여 괴기한 시대착오적인 이념과 권력 금력을 휘두르며 비공화적, 반민주적 억압과 압제에 시달린 것이다. 여기에 희생당한 수많은 국민과 동행하지 못한 죄책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는 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죄책고백과 화해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잘못된 과거의 진실을 밝히고, 밝혀진 진실을 바탕으로 합의에 의한 과거의 청산과 미래지향의 화해를 실현시키는 범국민운동에 나서자는 것이다. 적어도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반면교사라 할 수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제시하고 실천한 <진실과 화해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의 발자취를 배워보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이 살아가는 오늘과 내일은 단순한 과거청산의 보복적 수레바퀴만 틀을 바꾸어 돌아가고 있으며, 진실규명과 이에 따른 합의된 “청산-화해-용서-헌신”의 과정을 통한 미래참여의 길이 막혀있는 것이 아니냐는 안타까운 민의의 함성이 커 감을 알아야 한다.

- 이제 21세기의 선진 세계를 살아갈 우리나라의 종교사회는 이 나라를 “진실과 화해”를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수용하는 선진적 민주공화국으로 바뀌는 일에 헌신해야 옳다. 그것이 종교인들의 종교 신앙적 정체성이고 대한국민으로서의 시대적 과제이다. 기독교가 말하는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 그리고 불교가 말하는 사회의 “목탁”의 모범적 담지자가 종교요 동시에 종교적 신앙이 있는 종교인들이라 확신한다. 종교인 연대는 바로 이런 과제와 역할을 중심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종교인들이 보여준 모습 곧 사회의 변화와 흐름을 온도로 분석하고 알려주는 “온도계”(thermometer) 역할이 아니라 흐름과 변화를 정의롭게 고치고 조정하는 “온도조절기”(thermostat)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는 미국 민권운동가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호소를 경청하면 좋을 것이다.

<3·1운동>에서 <평화통일 운동>으로

- 분단된 독일의 통일(1989~90)은 유럽에서의 적대적 냉전의 해소와 함께 당시의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공산세계의 집단적인 몰락과 맞물려 돌아간 시대적 사건이었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시대변화의 전조가 있다. 냉전대결이 최고도에 달하던 지난 1980년대의 상황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사건이 있었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1979)을 빌미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66개국(한국 포함)이 모스크바 올림픽(1980)에 집단적으로 불참했다. 그 다음의 미국 LA 올림픽(1984)에는 소련을 포함한 공산국가들(북한 포함)이 불참했다. 평화 스포츠 축제는 기어코 서울 올림픽(1988)에서 기염을 토했다. 전 세계국가가 동참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89년에는 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동구권 공산권이 집단으로 붕괴되고, 동서독은 서독으로 병합되는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었다. 어느 누구의 계획도 아니었고 예상도 뛰어 넘었다. 하늘의 임재로 밖에 설명이 안 된다. 기독교에서는 이를 kairos의 역사라고 한다. 일상적인 역사인 chronos의 사건은 아니다.¹⁾

1) '크로노스(chronos)'는 연대기순의 시간, 즉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으로 종료점을 가지는 특별한 행위를 나타낸다. '카이로스(Kairos)'는 하느님의 영원한 시간으로 전체 미래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과거를 요약하는 현재 순간의 시간을 나타낸다.

- 그 뒤로 30년이 지난 지난 해의 평창 동계올림픽(2018)은 또 하나의 kairos를 쓰고 있다. 전 해 까지만 해도 전쟁의 위기를 말하며 안정부절 못하던 상황을 감안한다면 2018년에 이어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2018.4.27., 5.26., 9.18~20.)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2018. 6.12, 2019 2.27~28)의 개최는 정상회담의 쌍방 간에 “밀당”이 당연히 존재하지만, 그래도 유일한 냉전의 잔재인 한반도 분단의 극복이 가시권에 들어온다. 이 역시 한반도에 피우기 시작하는 평화와 통일의 kairos라고 기꺼이 주장할 만하다. 이제 우리는 원군으로 내려온 하늘의 kairos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헌신하는 길을 찾으면 된다. 특히 예상을 뛰어넘는 <북미회담>은 북한의 “핵 개발”이 단초를 제공했으나, 핵 갈등 해법을 시작으로 통일을 향한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집단적 평화가 세계의 공동관심사로 이행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 이미 남북 정상 간의 <판문점 선언>(2019.4.27.)에서 민간 영역을 포함한 남북관계의 전면 위협 해소 노력, 비핵화와 그에 상응하는 체제 보장 및 다자간의 평화협정 체결 등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협력 등을 합의한 것들이 북미 정상 간에도 수용된 점에서 하나의 이정표를 제시한 셈이다. 이 합의들을 확정하고 합의하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은 물론 험난하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분명한 것이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곧 남북의 통일도 남북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도 이제는 “전쟁”의 방식이 아닌 “평화적 방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합의된 공감대이다. 결국 이제 우리는 평화 통일의 당사자로서 남한 내부에서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결연한 자세로 밀고 갈 것이 있다. 남북 간에 “평화 공존”의 삶을 이어가야 하고, 그것이 평화적인 절차에 의해서 “통일”로 귀결된다는 희망 말이다. 분명하게 말해서 그동안 남과 북을 스스로 움아매고 괴롭혀 온 일방적 희망사항인 동시에 불신의 단초로 삼아왔던 “적화통일”도 “흡수통일”도 이제는 공적 담론에서 아예 장사지내버리자는 것이다.

<3·1운동>에서 <한반도 통일운동>과 <동북아 평화운동>으로

- <3·1독립 선언서> 중에 조선의 독립은 “동양평화로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평화 인류행복에 필요한 단계”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여기서 일본, 중국, 조선의 3자가 만드는 “동양평화”의 내용과 형식이 무언지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동양평화 문제는 식자들 간에 널리 통용되었던 것으로 특히 안중근이 여순 고등법원장과의 면담(1910.2.14.)에서 제시했다는 “동양평화” 사상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상세한 내용을 다 언급할 계제는 아니나 한중일 3국이 공통의 유교문화, 언어의 접근성, 인종적 통류, 지역적 인접성 등의 기초여건을 바탕으로 예컨대 “여순”을 3국의 공동관할 항구로 삼고, 이곳에 동양평화회의 본부를 두고, 은행도 병설하여 공동으로 활용하고, 전 세계 인구의 2/3에 달하는 천주교인들을 지휘하는 교황의 동참과 협력을 받는 방식까지 제안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최소한 동북아의 지정학적 여건상 조선의 독립과 자주적 생존은 필연코 주변 강국들과의 평화공동체적 협약과 결속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정책을 엿 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 소위 “동북아 평화체제”는 오늘날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도 필연적 연결점에 속한다. 남북의 평화공존을 담보할 틀인 “평화협정”과 함께 이를 지원하고 보장할 주변 국가들의 “평화체제”는 필수적 요소이다. 동북아로서는 이런 지역 평화체제의 본보기로 EU의 경우를 통해 지혜와 대안을 가장 잘 얻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위에서 지적한 대로 남북 간

의 내적인 “민족 평화공동체”형성과제와 더불어 한반도 주변 4대 강국과의 “동북아 평화공동체” 관계에도 유념해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독일통일 당시 미국 측은 서독이 통일 이후에도 「NATO」에 계속하여 잔류한다는 사전협상안을 만들어 서독지역 점령국 이면서 통독에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었던 영국과 프랑스의 동의를 구하였다. 이것은 과거 통일독일이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일으킨 경험 때문에 통일된 독일의 “무서운” 힘을 우려했던 서구국가들의 입장을 고려한 대책이었음을 알릴 필요가 있다. 이미 당시 소련은 “무력한 골칫거리”인 동독을 버리고 자기 자신의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성공을 위해 서독의 경제지원과 서방측의 정치적 협력을 절실히 필요로 했다. 이러한 유럽의 <2+4> 협력 등식을 통하여 한반도 중심의 동북아의 <2+4> 협력관계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유럽의 여러 지역통합이 외부로 부터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집단으로 보호하자는 취지보다는 그간 역내 국가들끼리의 수많은 전쟁갈등과 참화를 몸으로 끌어안고 사는 유럽으로서는 “유럽 평화공동체”가 서로 간의 전쟁을 막고 폭력적인 대결을 막아줄 틀로서의 지역평화 체제에 모두가 공감한 것이다. 솔직히 동북아 역시 지난날 청일전쟁, 노일전쟁, 한반도 일제 식민지화,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진입과 일본 패전 등의 전쟁사가 자리하고 있다. 지금도 미중 간의 무역전쟁과 안보 갈등으로 역내 평화가 풍전등화이다. 결국 한반도 통일과 평화체제는 동북아 당사국 상호 간의 동북아 평화체제 확립과 맞물려 있고, 이를 통해 전쟁이나 폭력적 갈등을 방지하고 “공동안보”와 “경제협력”을 통해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틀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반도 통일이 주변 국가들에게도 부담이나 손해가 아닌 공동이익임을 설득하고 그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결실로 이끌 과제가 있다고 믿는다.

- 따라서 현재의 종전협정(미·중·북 서명)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이것이 장기적으로 동북아/동아시아 지역의 공동안보와 평화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함이 중요하다. 현재의 6자 당사국이 상호안보이익을 위해 직접 당사자들 또는 후원자로 참여하는 새로운 평화협정으로 인해서 “동북아판 나토”의 출현을 기획하고, 협력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을 대변하는 주한미군의 위상이 동북아 평화유지군의 일환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동아시아 참여 당사국들 간에 첨예하게 대결구도가 되고 있는 이슈들(예: 독도, 센카쿠 열도 등)에 대한 참여국들 상호간에 대결이 아닌 조정과 화해를 사전에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판문점을 “동북아 평화유지군”(가칭)의 사령부로 삼아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대변력을 기할 수 있다. (예: NATO 사령부가 있는 벨기에 참조) 동시에 이와 연관하여 DMZ를 국제평화의 동산으로 바꾸어 지속 가능한 세계생태공원으로의 변화와 동시에 UN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별 국제기구들을 유치하여 명실상부한 국제 평화센터의 보루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3·1운동의 정신과 미래 100년의 준비

법륜 스님

3·1운동의 정신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빼앗긴 나라를 되찾자는 자주 독립의 정신, 둘째 민(民)이 주인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대한민국 수립운동의 민주주의 정신, 셋째 사회 배경과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같이한 국민통합의 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 100년을 돌아보면 3·1운동의 빛나는 정신은 아직 미완으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1945년 해방은 우리 스스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하고, 일본이 연합국에 패전해서 얻은 것이라 그 연합군에 의해 남북이 분단되고, 미소 양국의 신탁통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어 그들의 입맛에 맞는 남북한 정부가 들어섰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으면서 70년 넘게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립과 갈등으로 이어지는 분단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통일을 이룰 때만이 진정한 자주독립 국가를 세우는 것이고 3·1운동의 자주독립 정신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분단으로 인한 대립과 갈등 속에 독재정권이 들어서 민(民)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험난했습니다. 서슬 퍼런 독재정권의 압제 속에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10 항쟁, 그리고 2016년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비로소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가 되는 길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고루 반영되는 민주주의로의 길은 아직 멀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개선하여 민의가 골고루 반영되는 정당제와 풀뿌리 주민자치에 기반한 지방분권을 이루어 민(民)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셋째, 한국 사회는 양극화 문제, 지역 갈등, 종교 갈등, 성별 갈등 등으로 국론이 심하게 분열된 상태입니다.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고 합의를 이뤄나가는 국민통합의 정신을 되살려야 합니다. 이렇듯 민족의 염원인 통일코리아는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민주 발전을 통해 평화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100년 전 씨앗을 뿌린 3·1운동의 정신을 꽃피우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방향 속에 미래의 100년을 만들어나가는 것은 이제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새로운 100년은 “나라는 발전하고, 국민은 행복한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속성장으로 산업화에는 성공했으나, 아직 국민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곧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국민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경제적 평등과 인권이 보장되는 복지사회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또 북한 핵 개발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아직 우리가 전쟁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나라임을 말해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평화에의 확고한 의지 위에 통일코리아의 꿈을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를 기반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해야 합니다. 21세기에는 아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과제들을 하나씩 잘 해결해나간다면, 21세기 상반기에 통일코리아를, 21

세기 중반기에 아시아 평화공동체를, 그리고 21세기 후반기에는 세계 문명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100년의 꿈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3·1운동 미래 100년을 위한 시민운동의 과제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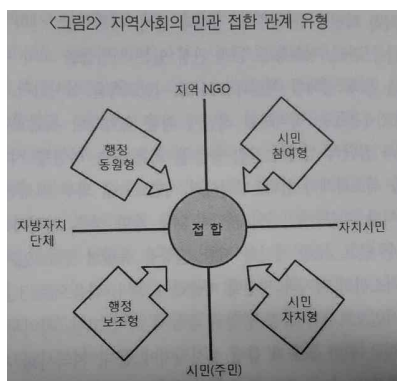
국민대 석좌교수 박 인주

<시민운동으로서 3·1운동 미래 100년>

필자는 3·1운동 미래 100년 준비는 3·1운동 100주년 선언문(자유, 평화, 상생)에 담겨있는 철학과 사상, 문제의식,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종교단체와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시민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한 시민운동으로서 3·1운동 미래 100년 준비 핵심을 두 가지로 정리, 제안한다.

1. 시민 참여형 신(新)사회 운동

3·1운동을 통해 우리의 미래 100년은 신(新) 사회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조용한 혁명으로서 신사회 운동은 시민 참여로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 집합행동으로서 조직적 기반 위에서 전개 되어야 한다 (김용직, 2016). 합리적 집합행동인 3·1운동이 지역사회에서 시민운동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자체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하다. 김상미(2012)는 지자체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지자체와의 관계 맺기는 매우 조심성을 요한다. 즉 시민단체와 지자체의 관계 맺기가 본질적인 목적과 달리 수평적이 아니고, 수직적인 관계로 구축될 수 있기에 매우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한 참고로 지역사회에서 민과 관의 접합관계를 유형화 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이는 김영수(2016)의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중층적인 접합관계 유형을 지역사회 시민단체와 지역사회 시민, 지역 자치단체의 접합 관계로 변용한 것이다.



그러면 시민운동으로서 3·1운동은 지자체와의 관계 설정을 어느 유형으로 하여야 하는가? 지역사회에서 3·1시민운동은 지자체와의 관계는 비판적 협력 관계이거나 협력적 비판 관계이어야 한다. 즉 수평적 관계 맺기로서 시민 참여형이나 시민 자치형이 바람직하다. 특히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많이 지원 받는 시민단체는 행정 동원형 단체가 되거나 행정 보조형 사회단체로 전략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지역의 정파성과 연계되어 시민활

동의 정체성과 자발성이 훼손되기도 한다.

2. 인터넷 네트워크와 오프라인 시민 연대

시민운동으로서 3·1운동이 효과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온 라인 상의 네트워크 구축과 오프라인에서의 연대가 중요하다. 인터넷 네트워크는 그 연계성과 행위자 스스로가 노드(node)와 링크(link), 허브(hub)가 되면서 재형성되는 새로운 시민운동의 공간이 된지 오래다(송경재, p.56). 자발적 참여자이자, 인터넷 시민인 네티즌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사회적 이슈를 생산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을 전개한다. 이들이 생산한 이슈는 오프라인으로 확산, 확대되기도 하고, 오프라인 상의 이슈가 인터넷으로 유입되어 인터넷 상에서 재생산, 재구조화되기도 한다.

그리고 오프라인 상에서의 연대는 연대 조직 상호 간의 협력과 공동 행동을 통해 운동의 시너지를 획득 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의 네트워크와 오프라인에서의 연대는 두 가지 조직적 특성을 지닌다.

첫째는 운동의 핵심 조직은 내적으로는 강한 결속이 담보되어야 한다. 조직의 핵심 운동가들 상호간에 결속이 단단하지 못하면, 운동의 동력, 즉 추진력이 취약하여 대외적으로 확장성을 가질 수 없다.

둘째, 그러나 외적으로는 부드러운 연성 조직이어야 한다. 운동에 동의하거나 찬성하는 시민단체나 직능단체, 종교 조직, 그리고 지역사회 시민에게는 언제나 개방적으로 열린 조직이어야 한다. 시민운동으로서 3·1운동 미래 100년 준비가 성공하기 위해 한국사회의 다양한 세력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유기적 연대는 절대적 필요조건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맺는 말

시민운동으로서 3·1운동 미래 100년은 시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삶과 평화로운 사회, 관계로 잘 연동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 축의 비계적 연동으로 작으나 강한 조직 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종합 정리하면, 한국사회에서 3·1운동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활동에 머물 것이 아니라,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하고, 이 운동은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유기적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대중성이 있는 시민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역 단위에서부터 3·1운동 미래 100년 준비 공론화가 시작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자체와 비판적 협력관계로 좋은 관계 맺기를 하고, 이를 통해 인적, 물적 자원동원도 검토해 볼만 하다. 지역의 유기적 지식인들이 지역사회의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참여한 시민들이 더 불어 함께 토론과 토의를 통해 시민학습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에서의 시민이 참여한 3·1운동 미래 100년 준비는 지역사회의 신사회 운동으로서 조용한 혁명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비록 변화는 쉽지 않고, 변화의 길은 험난하나, 그 결과는 인류를 좀 더 행복 하게할 것이다. 역사는 역사의식이 있는 창조적 소수에 의해 시작되어, 다수의 시민 참여로 완성 된다. <끝>

제작 (사)겨레열살리기국민운동본부
02-741-4092